海外經濟情報 제2008-42호
2008. 8. 8.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차 장 김진홍(☎5291)

# 일본의 내각 개편과 향후 정책 전망

후쿠다 수상이 8월 1일 단행한 내각 개편에서 보수 성향의 인사가 대거 기용됨에 따라 고이즈미-아베 수상으로 이어지던 개혁 노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이번 내각은 고물가와 경기감속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소비세 증세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의 달성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개각 이후에도 내각 지지율이 미증에 그쳐 조기 총선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여당 내의 파벌 대립으로 정책 조율이 쉽지 않아 향후 주요 정책의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후쿠다 수상, 경제각료 대폭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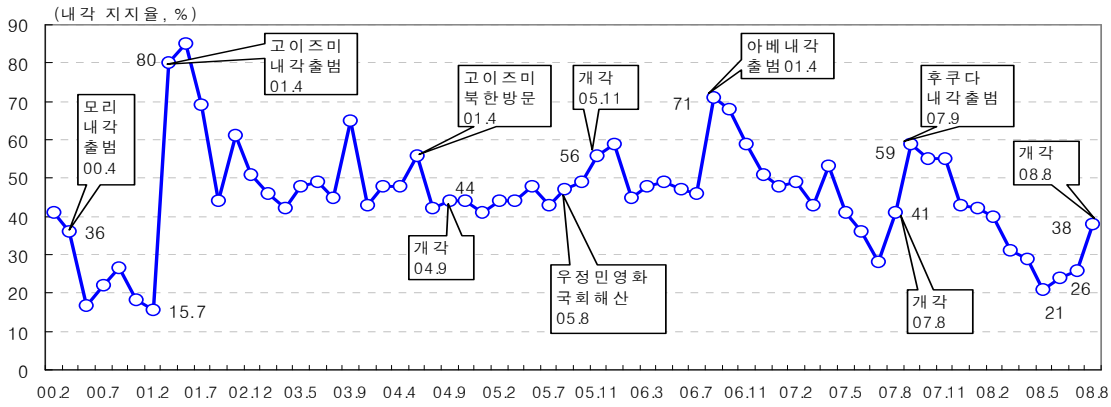
□ 후쿠다(福田康夫) 수상은 8월 1일 각료 17명중 13명을 교체하는 내각 개편을 단행

— 이는 후쿠다 수상 취임 이후 첫 번째 개각*으로 내각 지지율의 하락 및 정국 주도권의 약화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2007년 9월 수상 취임시 대부분 각료는 유임

○ 지지율은 취임 이후 지속 하락하며 과거 모리 내각 이래 최저수준

**2000년 이후 내각 지지율 추이**




자료: 닛케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각 월호)

— 경제 관련 각료는 11명중 9명이 교체되었으며 조기 총선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각료 경험이 있는 중진급 인사를 기용

○ 특히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이부키 전 자민당 간사장과 요사노 전 관방장관을 각각 재무장관 및 경제재정담당장관으로 임명

**경제 관련 각료 현황**

| 주요 경제 관련 부문 | 담당 각료 | | 비고 |
|---|---|---|---|
| 총무(지방분권, 도주제) | 마스다 히로야 | (増田寛也) | 유임 |
| 재무 | 이부키 분메이 | (伊吹文明) | |
| 후생노동 | 마스조에 요이치 | (舛添要一) | 유임 |
| 농림수산 | 오타 세이이치 | (太田誠一) | |
| 경제산업 | 니카이 도시히로 | (二階俊博) | |
| 국토교통 | 다니가키 사다카즈 | (谷垣禎一) | |
| 환경 | 사이토 데쓰오 | (斉藤鉄夫) | |
| 금융, 행정개혁, 공무원제도 개혁 | 모테기 도시미쓰 | (茂木敏充) | |
| 경제 재정정책, 규제 개혁 | 요사노 가오루 | (与謝野馨) | |
| 과학기술, 소비자행정추진 | 노다 세이코 | (野田聖子) | |
| 저출산대책, 남녀공동참가 | 나카야마 교코 | (中山恭子) | |

□ 이번 개각에 대해 고이즈미—아베 수상으로 이어져 오던 개혁 의지가 상당부분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등 부정적 시각이 우세

— 3년전 고이즈미 내각의 우정민영화에 반대하여 탈당하였다가 복당한 노다(野田聖子)의 입각이나 과거와 같은 재정지출 확대 등에 긍정적인 아소(麻生太郎)의 간사장 취임 등이 개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

○ 또한 공무원 개혁에 주력하던 와타나베(渡辺喜美) 금융·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물러나고 재무성 출신인 이부키(伊吹文明), 親관료파인 요사노(与謝野馨)의 입각으로 개혁이 후퇴하고 재무성의 권력이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

○ 조부(上武)대학 다나카(田中秀臣) 교수는 이번 개각을 '총선거에서 지더라도 정권을 유지하게 되면 增稅할 것이며 마치 양의 가죽을 쓴 늑대‘라고 비난하면서 '고이즈미 개혁 노선은 완전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

— 기업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정책의 후퇴와 함께 소비세 증세에 따른 기업수익의 악화를 우려

○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될 경우 제품 가격이 4.8%(=110/105) 상승하나 가격전가가 쉽지 않아 증세분을 기업이 자체 부담할 경우 매출감소는 물론 수익성까지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

○ 데이코쿠 데이터뱅크가 개각 직전인 7월 하순경 실시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기업 의식조사에서는 50%를 넘는 기업이 세출삭감 노력 미흡,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소비세율 인상 반대 사유별 응답(복수) 기업[1] 비율**

| | 세출삭감 미비 | 경기악화 가속 | 정치 불신 | 가계 부담 한계 | 법인세수 대책우선 | 다른 세목 증세 필요 | 소비세 폐지 |
|---|---|---|---|---|---|---|---|
| 전 체 | 80.2 | 66.8 | 50.3 | 28.9 | 23.1 | 18.5 | 2.4 |
| 대 기 업 | 81.4 | 67.2 | 46.0 | 34.0 | 21.3 | 18.1 | 2.1 |
| 중소기업 | 79.8 | 66.7 | 51.3 | 27.6 | 23.5 | 18.6 | 2.5 |

주: 1) 2008년 7월 18일~7월 31일중 전국 21,040사 대상조사(유효회답률 50.6%)
자료: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7월 경기동향조사

○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대책 조속 수립 방침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개각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시현

**(신 내각, 경기대책 마련과 재정 건전화 추진을 강조)**

□ 이번 내각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정재건 등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

—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대책과 함께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타개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

○ 요사노 경제재정담당장관은 아소 간사장과 협의하여 고물가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기대책의 골격을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마련하겠다고 발언

○ 이와 관련 아소 간사장은 경기대책을 위해서는 고이즈미 내각이 정한 국채발행한도(30조엔)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며 5조엔 이상의 경기부양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을 시사(올해 발행예산은 약 25.3조엔)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주요 대책의 마련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표명

○ 후쿠다 수상은 개각 직후 회견에서 일본이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와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라는 2개의 큰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최대 과제라고 언급

○ 아울러 개각 직후 나카가와(中川秀直) 전 간사장에게 2010년도까지 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확대나 해외 우수인재의 수용 전략 등 경제 재정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지시

— 또한 후쿠다 수상은 민생을 중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

○ 구체적으로는 내각부 산하에 소비자청(가칭)을 2009년 중 설치하여 소비생활과 관련된 주요 생활관련 거래(소비자보호 등), 표시, 안전(식품안전 등)은 물론 소비자신용 및 물가정책까지 총괄하도록 할 방침

**후쿠다 신임 내각의 향후 정책 방향**

| 분야 | 주요 과제 |
|---|---|
| 긴급 경기대책 | 2008년 9월까지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등 마련 |
| 재정재건 | 2011년도 기초적재정수지 흑자 추진방침(일정 연기 가능성) |
| 소비세율 인상 | 2009년도 기초 연금 국고 부담 인상분에 대한 재원 확보<br>2008년 가을경 조세부문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 |
| 성장전략 | 2010년도까지 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 확대<br>해외로부터의 우수 인재 수용 등 글로벌화 전략 |
| 소비자안심 | 2009년 4월경 내각부 산하에 소비자청(가칭) 설치(식품안전, 거래상 소비자보호 및 물가정책 등을 총괄) 추진 |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

□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여당 내의 정책 대립도 첨예하고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 등 신임 내각의 일관된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

— 후쿠다 수상이 개각 직후 담화에서 '유가 상승 영향에 대한 긴급 대책', '기동적인 경제 운영' 등을 최우선하겠다고 강조하였으나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 일시적인 처방은 가능하더라도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감속에 대해 일본이 단독으로 시행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집권 여당 내에서는 요사노 경제재정담당장관을 대표로 하는 재정재건 중시파와 나카가와 전 간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을 통한 자연 세수 증대 주장파가 관련 정책에서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황

○ 요사노 등이 주축인 재정재건 중시파는 소비세를 10%로 증세할 경우 재정재건의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나카가와 등은 성장전략이 포함된 고이즈미 개혁 노선의 기본방침을 유지하더라도 성장 확대를 통한 세수 증대로 재정 건전화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

○ 참의원이 여소야대인 상황인데다 중의원의 여당 내에서도 파벌 대립이 심해 정책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아울러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전 수상이 7월 3일 강연에서 개각을 강행할 경우 국회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도 있어 후쿠다 수상이 국회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거까지 고려한 단기 내각이라는 평가도 제기

○ 자민당의 고가(古賀誠) 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후쿠오카현의 강연에서 '종전까지는 총선거의 시기를 내년 초로 보았으나 후쿠다 수상의 임기가 점차 만료될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

○ 정치평론가 고바야시(小林吉弥)도 이번 내각 개편 이후에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 8월말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해산에 따른 총선거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개각 직후 지지율 조사결과 요미우리와 일본경제신문만이 각각 41.3%, 3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아사히 24%, 마이니치 25%, 교도통신 31.5% 등 정권유지 위험수위로 평가되는 30% 미만 지지율에서는 완전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다 이번 개각에서 개혁 후퇴 및 정국 불안 지속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주식시장 등이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신코증권 등은 '주식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며 '소비세 증세는 반대하지 않으나 해외 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의 소비세 증세는 네거티브 메시지로 수용되어 외국 투자가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지적

○ 다만 다이와증권SMBC 등 일각에서는 과거 오부치(小渕恵三) 내각(1998년 7월~2000년 4월)과 같이 대량의 국채발행*이 따르는 대형 경기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은 적어 주식, 채권 등 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

* 국채발행 잔액이 1997년 258조엔에서 2000년 367.6조엔으로 급증